



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해 나가기로

- 한덕수 국무총리,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련 관계장관회의 주재
- 범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(금) 오후,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*를 주재하였다.

* (참석) 보건복지부, 교육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

○ 이 날 회의는 전일(10.19.) 발표한 ‘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’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□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.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.7명에 한참 모자라며, 그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, ‘응급실 뺑뺑이’ 등 국민 일상 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.

○ 그간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*을 마련하였으나,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.

* 「필수의료 지원대책」(23.1), 「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」(23.2), 「응급의료 기본계획」(23.3), 「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」(23.7), 「소아의료 보완대책」(23.9) 등

□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의사, 병원, 환자,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‘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’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.

- 특히, 이날 회의에서는 **의대정원 증원**만으로는 **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**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,
 -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**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, 필수의료 수가 인상, 전공의 처우 개선**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**범부처가 협력**하기로 합심하였다.
- **국무총리**는 보건복지부에 **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, 의료현안협의체** 등 논의구조를 통해 **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**하고, **상황팀**을 설치하여 **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**하도록 지시하였으며,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**적극 협조**할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장 성현국 (044-200-2293)
	사회복지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조영기 (044-200-2294)
<공동>	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	책임자	과장 송양수 (044-202-2430)
		담당자	사무관 진상인 (044-202-2431)
			사무관 김영훈 (044-202-2442)
<공동>	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	책임자	과장 강병중 (044-215-8590)
		담당자	사무관 서준익 (044-215-8591)
<공동>	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	책임자	과장 박준성 (044-203-6910)
		담당자	사무관 조진행 (044-203-6916)
<공동>	법무부 형사기획과	책임자	과장 임세진 (02-2110-3269)
		담당자	검사 문호섭 (02-2110-3544)
<공동>	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책임자	과장 신지혜 (044-205-2301)
		담당자	사무관 서호성 (044-205-2308)
<공동>	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	책임자	과장 이준호 (044-203-2911)
		담당자	서기관 여동빈 (044-203-2913)